

정부, 화학물질 운송차 실시간 추적

환경부, 2005년부터 수송과정 사고 최소화키로 ... 대응체계도 재정비

이르면 2005년부터 사고 위험이 큰 화학물질 운송차량을 실시간 추적해 도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빠른 시일 안에 운송안전시스템을 구축해 화학물질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송 과정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6월20일 밝혔다.

운송안전시스템은 정부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23억원을 들여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CARIS)> 구축 사업의 마지막 단계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2002년 1단계 사업을 통해 일선 소방서와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 사고 대응기관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방제관련 정보, 화학물질 확산범위 및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 대응 시나리오를 제공해 왔다.

2004년 2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와 사고대응기관 간의 쌍방향 사고전파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6월 현재 300개 사고대응기관에 구축된 시스템을 9월까지 45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1170개 불과한 화학물질정보도 2004년 말까지 1951개로 늘릴 방침이다.

화학물질은 전세계적으로는 10만여종에 이르지만 국내에서는 약 3만8000종만이 유통되고 있으며, 황산 등 일부 금수성 화학물질은 화재 시 일반 방화수를 살포하면 오히려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등 특성이 매우 다양해 각 화학물질에 따른 관리와 사고대응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6/22>